

Ⅲ. 主要 政策 解說 (96. 12. 17 ~ 97. 1. 13)

- 중소기업청, 「중소기업 금융 지원 대책」 마련(12.17)
 -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중소기업 구조 개선 지원 확대, 중소기업 회생 특례 제도 도입, 공제 사업 기금 대출 금리 인하 등
- 통상산업부, 「油價 자유화 실시 대책」 마련(12.18)
 - 국내 유가 모니터링제 실시, 가격 표시제 강화 및 소비자 신고센터 설치·운영등 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, 국내 유가의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지도 실시
- 정보통신부, 본격적인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제 정비(12.18)
 - 한국 정보 문화 센터와 시스템 공학 연구소의 교육·훈련 기능을 통합하여 한국 정보 문화 센터(가칭) 부설 정보 기술 교육원을 발족시킬 예정
- 국회, 노동관계법 통과(12.26)
 - 정부안의 내용 중 상급단체 복수 노조 3년 유예, 정리해고제의 요건 일부 강화라는 두 가지 조항만 수정된 채 여당 단독으로 통과
- 재정경제원, 「상업차관 도입 및 외화증권발행 제도」 개선(12.30)
 - 자본재 산업 육성, 설비투자 촉진 및 사회간접자본 원활한 확충 목적
 - 기업, 지방자치단체, 민자유치 제1종 시설사업자 등에 대해 상업차관 도입과 외화증권 발행을 통한 외화차입 기회를 대폭 확대
- 국세청, 「國稅 統合 시스템(Tax Integrated System: TIS)」 개통(1.7)
 -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시행, 전산화로 선진세정 도약 기반 마련, 세정의 객관화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목표
 - 세원 관리의 과학화, 사무관리의 자동화, 조사관리의 개선, 대국민 서비스 선진화 기대
- 재정경제원, 「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제도」 개선(1.13)
 - 지자체 국고보조금 예산 규모 23.6% 증액,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단순화, 지방비 부담 70% 이상 사업은 지자체 요구를 전액 반영, 지자체와의 협의 강화 및 지자체 의사 최대한 반영, 보조 사업간의 전용 허용 및 집행절차 간소화